

2013년도 정기세미나 종합자료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 인사말	4
▶ 주제 발표 < 국가위기관리와 언론의 기능 > 소주제 : 미국의 전쟁보도로 살펴본 위기시의 언론보도	
I. 서론	6
II. ‘국가안보와 언론보도’ 상호작용	8
가. 한반도 안보환경과 언론의 파급력	8
나. ‘군과 언론’의 갈등 요인	11
III. 미국의 전쟁보도 시스템 변화	12
가. 2차 세계 대전까지의 경험	13
나. 한국전과 베트남전 여파	15
다. 지속된 갈등과 시행착오	17
라. 이라크전과 임베딩(Embedding) 시스템	22
마. 최근 미군의 대언론 관계 지향점	25
바. 미국의 경험을 통한 시사점	27
IV. 국가안보 위기시 언론보도 조화 방향	30
가. 천안함·연평도 사태 취재보도 경험 재조명	30
나. 문제점 및 교훈	33
다. 조화방향 및 실천과제	35
V. 결론	37
※ 부록 : 국가안보 위기시 취재보도 기준	43
▶ 지정 토론	46
▶ 종합 토론	54

인 사 말

바쁘신 와중에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김철우 위원님과 지정토론을 해주신 박현재 위원님, 송종길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파란 강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 앙상한 나뭇가지의 쓸쓸한 모습, 그리고 먼 산 위에 하얗게 쌓여있는 눈을 볼 수 있어 풍광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라 할지라도 포성이 울리거나 총탄이 쏟아진다면 경치를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는 소중한 것입니다.

평화를 생각하면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가 위협받게 되면 국가에 위기가 닥치고 평화가 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전쟁이야말로 국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 요소로 분석할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는 무기입니다. 탱크나 비행기와 같은 무기 이외에도 우리는 언론미디어라는 것도 무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의 본질은 무기가 아니나 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무기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미디어는 양날의 검입니다. 도는 한 쪽에 날이 있지만, 검은 양쪽에 날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미디어를 소극적으로 보면 반전여론을 형성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일치된 단결을 조성하며,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능력 중에서 언론의 두 가지 작용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승리만이 전쟁의 승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승리를 했을지라도 무자비한 살상 등 인적 자원의 낭비가 따른다면 이를 승리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인권보호의 측면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승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살상을 막고, 중요한 문화재를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그것이 언론이 능력을 발휘해야 할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언론미디어의 역할은 비단 현대에 와서 그 비중이 커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시 언론미디어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미디어를 두고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조정하는가는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내용이 우리 언론이 국가 위기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순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13. 11. 28.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 성

국가안보 위기관리와 언론의 기능 고찰

-미국의 전쟁보도 시스템 변화 및 시사점-

김 철 우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서 론

‘국가안보와 언론보도’는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 위기 시 언론의 보도는 위기 자체의 향배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태도·신념·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안보 차원의 긴박한 위기나 재해재난, 전쟁은 최대의 뉴스이며 각종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통해서 국가안보 위기가 촉발되었을 때 언론의 파급력을 체감했다. 당시 군 당국의 대응 조치와 관련한 논란도 많았지만 ‘군과 언론의 관계’ 정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안보와 미디어 환경 변화의 상호작용을 새롭게 조망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보도를 둘러싼 군과 언론의 갈등을 겪으며 양 집단의 여망을 수용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베트남전에서 TV의 위력을 실감한 미군이 언론통제·차단 위주로 접근했다가 역풍을 맞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91년 걸프전에서는 최첨단 정밀무기 영상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며 공동취재단(pool) 위주로 전시언론정책을 펼쳤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임베딩(Embedding)’ 프로그램을 창안하여 기자들이 전투현장에 직접동행하면서 취재토록 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라크전이 발생한지도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미디어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실례로 2011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이후 이집트·리비아 등 아랍권 민주화

열풍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SNS)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인터넷 및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정보유통 활성화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유발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안보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재조명해야 할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처럼 안보 위기가 국민의 생존과 삶의 터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 국민 안보의식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이 사태를 신중하게 취재 보도 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고조된다.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연평도가 시커먼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국내외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사진과 동영상의 파급력은 ‘한국판 9.11’에 비유될 만한 중차대한 사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들은 마치 스포츠 중계처럼 흥미위주로 보도하거나 각종 ‘의혹·의견·추정’을 쏟아냈고, 인터넷을 통해 논란과 불신이 증폭되는 뼈아픈 체험을 했다. 미디어 환경변화의 큰 흐름이 ‘다양성에 편승한 무책임’으로 치달지 않고 ‘자유롭되 책임 있는’ 언론의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 안보위기가 촉발되었을 때 언론은 상황을 알리는 ‘전달자(messenger)’ 또는 정부나 군의 조치를 비판하는 ‘파수꾼(watchman)’으로 기능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안보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는 ‘동반자(companion)’로서 기능해야 한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언론인가?’를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원화된 미디어 환경뿐 아니라 안보위기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비정규전, 국지도발, 테러위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속출하고 정보유통 질서를 특정국가나 군대가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도 새로운 도전이다. 따라서 국가위기 관리의 핵심적 주체들이 언론보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전쟁보도 관련 시스템의 변천을 고찰하는 시도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전쟁보도를 둘러싼 군과 언론의 갈등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가안보와 언론보도’ 상호작용 관점에서 미국의 전쟁보도 시스템 변화를 고찰하여 언론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안보위기 사례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천안함·연평도 사례를 재조명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언론은 안보위기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informing)’ 기능을 넘어서 위기자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안보정책에까지 ‘영향을 주는(influencing)’ 결정변수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에 상응하도록 군과 언론의 조화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가안보와 언론보도’ 상호작용

가. 한반도 안보환경과 언론의 파급력

한반도 안보환경은 뉴스가치가 높은 불안정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개발, 체제불안 및 권력세습, 대남 국지도발 등 한반도 안보위기 관련 뉴스는 정세인식뿐 아니라 정책결정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준다. 안보 위기는 북한 요인이외에도 주변국의 군사위협, 각종 테러 및 소요사태, 재해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 개념적으로 따져보면 ‘국가안보위기’란 ‘국가 위기’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¹⁾ ‘국가안보위기’는 통일·외교·군사 등이 복합된 ‘북한 관련 위기’와 주변국과 충돌을 일으키는 ‘외부 관련 위기’, 공공의 안녕 질서 관련 ‘내부 위기’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²⁾ 이 글에서는 논리 전개를 위해 ‘국가안보위기’의 기준을 한정하고자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평소와 다른 비상상황이 촉발되어 군사작전이 사태해결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를 국가안보 위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군사작전이 사태해결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 언론과 군이 취재보도를 둘러싸고 갈등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재해재난, 외교통

1) 국가위기란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관련근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2008.10.13)

2) ‘북한 관련 위기’는 군사력 사용 위협, 국지도발, 비군사적 위협, 북한 내부 급변사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국제 갈등 등을 말하며, 위기 유형으로는 북핵 우발사태, 서해 NLL 우발사태 등이 있다. ‘외부 관련 위기’는 우리나라와 주변국(또는 기타 국가)의 갈등·충돌, 주변국 간 충돌·전쟁으로 인한 위협 등을 말하며, 위기 유형으로는 독도 우발사태, 재외국민 보호, 파병부대 우발사태, 비군사적 해상분쟁 등이 있다. ‘내부 위기’는 국정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오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심각히 위협하는 상황을 말하며, 위기 유형으로는 대통령 권한 공백, 대규모 소요·폭동 등이 있다.

일 분야 이슈, 국내질서 관련 소요사태, 사회경제적 혼란, 사이버 및 기반시설 공격 등 국가위기 유형에도 언론의 기능이 중시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국지도 발이나 일촉즉발의 무력시위 등이 본 논문의 일차적 관심 대상이다.

남북한 및 주변국들은 나름대로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요인을 적절히 배합하며 자국의 국익증진 및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미디어의 영향력을 활용한다. 미국에서는 9·11테러 이후 이러한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 개념을 발전시키고 적용해 왔다.³⁾ 언론 환경이 '미디어 빅뱅'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성, 융합성, 속보성, 접근성 등이 혼재함에 따라 안보전략차원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여론을 주도했던 유력 신문·방송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모바일 융합미디어'로 결집되는 현상이 식별된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이 강력한 '융합미디어'로 부상했다. 각종 뉴스에 사진과 동영상의 결합이 일어나고 스마트폰의 생활화로 '언제·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로 인해 과거의 일방적 수용자들이 여론형성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TV, 신문 등 전통미디어의 영향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제는 정보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사실과 의견이 혼란스럽게 뒤섞이며 여론의 쓸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안보위기가 촉발되었을 때 파급력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안보위기 관련 뉴스는 '실재하는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 언론인들이 취사선택·재구성·해석하여 '매개되는 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무엇을 보도하느냐(what)'의 영역보다, '어떻게 보도하느냐(how)'라는 관점이 결정적 영향을 준다. 언론은 안보위기와 관련하여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의 의미를 한반도 안보위기 관리 차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포인트가 식별된다.

3) 전략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은 국력의 제요소를 긴밀하게 통합시켜 만든 계획, 주제, 메시지, 행동 등을 활용하여 국가전략목표를 달성하고 안보 환경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군사 위주의 마인드를 뛰어넘어서 21세기 안보 도전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전략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개념이다.

첫째,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안보위기 뉴스는 각종 미디어가 일제히 보도하여 순식간에 확대·재생산되는 정보유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도 쓰나미’에 비유할 만한 휩쓸림 현상을 유발한다. 따라서 위기관리를 주도해야 할 커뮤니케이터들의 ‘메시지·이미지·행동’에 사실성·적시성·상징성이 미약하면 국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시대로 변모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정부 또는 군 당국의 발표를 신뢰하기 때문에 작전현장에 대한 취재보도진의 접근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생존투쟁에 가까운 과잉경쟁이 심화되어 편집·보도 독립성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 부문 간 경쟁 뿐 아니라 동일매체군 내부의 경쟁이 치열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참여문화가 위기촉발 시에 폭증한다. ‘1인 미디어’에 비유되는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생산자가 되어 공론의 장에 동참한다.

셋째, 충격적 안보위기 뉴스의 폭발력으로 인해 적시성을 상실한 당국의 뒤늦은 사실 확인 과 해명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촉발한 사태의 상징성을 간파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메시지 관리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른바 ‘말 바꾸기’ 논란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위기뉴스가 촉발되었을 때 당국은 초기단계에서 현장 조치 못지않게 언론브리핑을 공신력 있게 실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북한 당국이 교묘히 대남 보도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포인트다. 그들은 기습적 발표, 성명이나 행동, 무력도발로 한국 언론을 당황시켜 뉴스가치를 키우는 기교도 부린다. 기자들은 북한 돌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북한이 주도하는 위기 뉴스를 추종하는 양상까지 벌어진다. 나아가 북한 관련 국제뉴스의 근원지가 서울발 기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북한 관련 위기 뉴스를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국제여론 형성에 연쇄반응을 유발한다.

나. ‘군과 언론’의 갈등 요인

군과 언론은 속성상 갈등관계를 유지하기 쉽다. 군은 대체로 기밀주의 입장을 취하며 언론의 취재보도를 통제하려는 속성이 강하고,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자유로운 취재·보도를 당연시한다. 양 집단은 근원적 갈등요인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론에 공감하지만, 현실은 군의 기밀주의와 언론의 공개주의가 갖가지 갈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안보위기가 발생한 작전지역에 취재기자들의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나타난다. 취재진을 작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조치는 영상 확보를 중시하는 TV 매체에 심각한 압박요인이다. 현장 접근을 둘러싼 군관계자와 취재진 간의 첨예한 갈등은 보도내용에 부정적으로 투영될 개연성이 높다. 군이 작전상 공개할 수 없는 기밀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잘못을 은폐하려는’ 조치로 오인할 소지가 많다. 군 당국이 취재진의 입장을 배려하여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언급할 경우, 추후에 신뢰를 잃게 되는 부작용이 따른다.

군과 언론이 취재현장에서 벌이는 갈등 못지않게 언론사별 데스크 차원의 ‘편집 및 보도 방향’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당시에도 언론사 부장, 보도·편집국장의 지침이 취재보도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취재현장에서 기자들과 군관계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갈등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데스크의 취재 지시와 압박에 비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렵거나 통제요소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언론의 안보 위기 관련 취재보도는 데스크 차원의 수문장 역할(Gatekeeping)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취재보도 경쟁에 함몰되다 보면, 언론 역시 본의 아니게 적을 이롭게 하는 작전기밀 누설, 장병 및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많다.

군과 언론이 안보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누가 판단의 주체인가?’를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적어도 안보위기가 촉발되었을 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아님이 구현되어야 한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

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안보위기 관련 취재보도 역시 자유를 보장하되 군사기밀보호법, 통합방위법, 국방홍보훈령 등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군사기밀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도 안 되지만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군 작전 기밀이 언론에 의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서도 안 된다.

군인과 언론인의 갈등관계는 ‘상호간에 너무 상대 집단의 특성과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려는 노력도 적었다’는 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 상호 의사소통 기회가 적으면 상대집단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stereotype)을 형성하기 쉽다. 군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취재보도 속성을 이해하여 군사작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언론 관리 및 활용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안보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 대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 등에 기민한 판단과 공보훈련이 요구된다. 언론은 사실(Facts)에 입각한 취재보도를 하되, ‘작전지역 주민·장병·취재진의 신변안전’, ‘적을 이롭게 할 정보와 작전에 대한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Ⅲ. 미국의 전쟁보도 시스템 변화

미국은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⁴⁾ 전쟁보도의 영향력을 체험해 온 국가다. 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9·11테러, 이라크전 등에 일련의 전쟁보도가 국내외 여론관리는 물론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교훈으로 삼아 전시언론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9·11테러를 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쟁을 본토가 아닌 외국에서 치루며 여론형성의 파장을 자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구사했다. 미국의 전쟁보도 시스템은 전쟁명분 축적, 군사개입, 작전수행, 종전 및 전후처리 등 전쟁 단계별로 대언론정책에 변화가 많았고 일화도 넘쳐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쟁보도 사례에 치중하지 않고 큰 흐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4)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중요한 국가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상대적 보장을 하고 있다.

가. 2차 세계 대전까지의 경험

미국은 멕시코 전쟁(1846-1848)부터 정부(군)와 언론이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 그 이후 남북전쟁(1861-1865) 당시에는 최초로 대규모 기자단이 전선에 파견되었다. 북군 측에서 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전선에 몰렸고, 이에 따라 언론통제도 강화되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은 전쟁보도에 불만을 품고 '시카고 타임스'를 폐쇄시키기도 했다. 스탠턴(Stanton) 국방장관은 제공된 보도자료 이외의 기사게재를 엄격히 금지시켰고, 이를 위반한 기자들은 구금조치 등의 혹독한 통제를 가했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당시에는 허스트 계열의 '뉴욕저널'과 풀리처 계열의 '뉴욕월드'가 전쟁보도 경쟁을 벌였으며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언론이 앞장서서 전쟁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선정적인 전쟁보도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이 국력을 신장하던 시기에 전쟁이란 최고의 뉴스 상품이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서 신문 매체가 급성장한 측면이 강하다. 뉴욕저널의 경우 스페인 전쟁 이전에 15만부에 불과했던 발행부수가 전쟁 이후 80만부로 대폭 증가했다. 전쟁보도가 선정주의로 흐르며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고 언론의 영향력 증대에 추동력이 되었다. 당시 직업군인들은 언론을 장병 사기 증진, 모병 활동, 예산 확보, 전쟁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수단 정도로 인식했다. 언론보도가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시절이었다.

2차 세계 대전이 격화되면서 미군은 보도 검열이나 선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통제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했다. 당시 전쟁특파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자들이 장교군복을 입고 마치 군무원처럼 전선을 돌아다니며 취재하도록 허용했다. 독일군의 선전(propaganda)에 맞대응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심리전에 대한 연구를 강화했다. 특히 당시의 매스미디어(신문, 라디오, 영화)가 사람의 인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중설득(mass persuasion)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었다. 일종의 '탄환효과'에 비유될 정도의 '강효과 이론'은 군대 뿐 아니라 광고업자, 정치가 등이 신봉하여 대중동원에 이용했다. 1927년

Lasswell의 연구가 대표적인 것으로 설문조사, 행동실험 연구, 사회심리학적 군중심리 연구, 선전선동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신문, 라디오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한 TV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영화,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1949년 Hovland의 연구는 영화를 활용하여 미군 징집병사들에게 2차 세계대전의 당위성을 주입시키는 효과를 측정했다. 이 당시의 연구들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연령, 교육, 성별, 기존의 성향, 인성, 관심도, 동기, 신뢰 등)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군과 언론의 우호적 협력관계는 미군이 설득심리전 등에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Edward R. Murrow와 같은 대기자가 안보친화적 논리를 개발하는데 앞장섰다. 전반적으로 2차 대전까지 미군과 언론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군 당국의 입장에서 취재도도의 황금기(golden age of war reporting)라고 할 만큼 국민적 전쟁지지 여론을 확보하는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언론이 애국적 차원에서 자기검열을 해오던 관행이 점차 약화되고, 매체간 경쟁심화와 경제상업적 동기 등으로 협조관계가 긴장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 8월 연합군의 스미스(Smith) 장군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규정을 제정하여 14가지에 달하는 보도금지 사항을 제시했다. 주로 군사기밀 및 작전보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언론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둔 1944년 5월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장군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특파원들이 정당한 뉴스를 취재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하는 등 군과 언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 당시 연합군 사령부에 등록된 기자는 460여명이었고, 이중 180명이 미국인 기자였다. 종군기자들은 병사들과 인터뷰하여 생생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사진을 촬영하는 등 전선에서 동고동락하는 관계를 형성했다.

나. 한국전과 베트남전 여파

한국전쟁 발생 후 1950년 9월 세계 23개국에서 한반도에 파견된 종군기자는 238명 수준이었고, 이중 약 60%가 미국 기자들이었다. 당시에는 취재한 기사를 본국에 송고하는 통신수단이 제한되어 우체국 전화를 이용하여 동경을 거쳐 본국에 전화로 구술하는 방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다. 맥아더 장군은 언론 검열을 혐오하여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인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했다. 무엇이 적을 이롭게 하는지는 특파원들 각자의 양식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이러한 군과 언론의 밀월 관계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기 까지 유지되었다가 1950년 11월 이후 중공군이 참전하면서부터 악화되어 1950년 12월 23일부터 보도검열을 실시했고, 12월 30일 극동사령부 명의로 언론관계 규정을 발표했다.⁵⁾ 한국전쟁은 군의 영웅적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부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던 2차 대전까지의 관행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전의 양상은 전혀 달랐다. 미군은 베트남전 패배의 원인으로 언론 보도의 영향력을 꼽을 정도였다. 군 당국은 TV의 파급력을 간과하여 자국 내에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2차 대전이나 한국전쟁과는 전혀 다른 게릴라전 양상으로 베트남전이 전개되었고 최전방 전선이 불분명했던 전장의 특성도 미군이 전시언론정책에 실패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자들이 군인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접근취재가 용이했으며, 휴대용 TV 카메라가 이용되었다. 미국 TV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전쟁의 비참한 장면을 안방까지 전달함으로써 미국의 여론이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전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미군이 미처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군 당국은 기자들이 베트남의 전투현장에 접근하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면 호의적 보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전투현장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과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군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의 참혹상과 미군의

5) 당시 규정 내용에는 ① 모든 기사는 그 문장이나 문맥상 정확해야 하며 ②적에게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③아군의 사기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④ 미군이나 동맹국 또는 중립국들에게 당혹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면 계엄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육군본부 공보실, 군과 언론, (서울 : 정문사), 1993년 10월, p. 109.

열세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군 고위층이 발표하는 전황보도까지 비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군과 언론의 상호불신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관계악화에도 불구하고 보도검열이나 직접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투현장에 자유롭게 접근했던 취재진들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처참한 전쟁의 이미지를 확산시킴으로서 전쟁 혐오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당시 미국 언론계를 풍미했던 상업주의적 센세이셔널리즘이 가세하여 반전여론이 견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다. 미군 지도층은 자국 언론의 비판적 논조와 참혹한 영상이미지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언론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악순환이 증폭되면서 TV 방송의 영향력이 반전여론 형성에 머물지 않고 전쟁의 승패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전이야말로 종군기자가 당국의 검열 없이 자유롭게 전선을 취재한 전쟁으로 간주하며 전쟁보도의 독립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식했다. 영상물 촬영과 취재가 본격화 되면서 TV가 전쟁보도의 주력 매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베트남전쟁에는 많은 취재기자가 전선에 투입되었다. 1964년 40여명에 지나지 않던 전선기자 수가 1965년 미군이 개입하면서 크게 늘어났고, 1970년대 들어서는 2천여 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언론사들이 자사 비용으로 장기간 종군기자를 전투현장에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확보된 탓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베트남전 충격 이후 미군에서는 ‘군과 언론’ 관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Sidle 위원회’가 전쟁보도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연구했다.⁶⁾ 그 결과로 도출된 것이 ‘국방미디어 풀(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Media Pool)’ 제도였다. 공동취재단(Pool)으로 통칭하는 이 제도는 특정한 기간 중에 한정된 취재보도 인력을 작전현장에 접근하도록 하여 취재 결과를 공유하여 보도하는 방식이다. 군 수송수단이 제한되거나 현장에 대한 접근 통제가 불가피할 경우로 한정해야 하지만 군이 부정적 보도를 통제하는

6) 1983년 11월 미 의회는 Winant Sidle 장군(MG)을 위원장으로 하는 초당적인 ‘전시언론관리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위원회(Sidle Military-Media Panel)를 구성하였다. Sidle 위원회는 ‘장병의 생명과 작전보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제도적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다. 군과 언론의 지도자들이 1992년에 ‘Pentagon-Media Conference’를 개최하여 양측의 입장 개진과 토론을 거쳐 전투지역에서의 뉴스보도에 대한 몇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방편으로 악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언론계의 반발을 초래했다.

다. 지속된 갈등과 시행착오

베트남전 패전 이후 미군 수뇌부는 언론을 기피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증오 감마저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 정서였다.⁷⁾ 당시 대언론 정책의 기초는 ‘기자들을 전투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서와 기초를 바탕으로 미군은 1983년 10월 그레나다 침공(Operation Urgent Fury) 당시에 언론의 접근 자체를 봉쇄했다. 이러한 대언론 정서는 미군내의 조직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한 반작용으로 언론계의 반발이 초래됐고 군과 언론의 갈등적 관계는 심화되었다.

당시 미합참의장 베시(Vessy) 장군은 군의 과도한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고 ‘言軍관계’ 회복차원의 패널을 구성하려 했지만 현직 언론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미국의 주요 10개 언론사는 1984년 1월 ‘군사작전 관련 언론 접근권에 관한 원칙의 진술(A Statement of Principle on Press Access to Military Operation)’을 통해 작전현장 접근권을 역설했다.

Sidle 위원회는 전쟁보도에 관한 군과 언론의 상호지침과 언론의 군사작전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1984년 8월 제출했다. 기자들을 작전현장에 접근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공동취재단(pool) 제도를 추천한 것이다. 또한 기자들이 군사작전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군에 의해 설정된 보안지침이나 기본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 12월 파나마침공(Just Cause) 초기에 미군 공보당국은 군에 우호적인 10여 개 언론사 기자들만 군용기로 태워 작전현장에 투입하여 극히

7) 미 해병대 장군출신으로 뉴욕타임즈 특파원을 지낸 Bernard Trainor는 당시 군의 신조가 ‘duty, honor, country, and hate the media’라고 표현할 정도로 언론에 대한 거부감이 컸음을 술회했다. 당시 주베트남사령관이었던 Westmoreland 장군은 TV방송에 대해 미군의 등에 칼을 꽂는(a stab-in-the-back) 행위라며 선정적 보도를 비난했다. Bernard Trainor, "The Military and the Media: A Troubled Embrace," *Parameters*, 1990 December, p. 2.

제한된 동선의 범위 내에서 취재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했다.⁸⁾ 이른바 언론을 작전 현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Keep the press out!) 시키려는 군 수뇌부의 마인드가 적용된 것이다. 공동취재단이 취재한 기사 역시 보안성 검토를 명분으로 사실상 보도검열을 실시했다. 원천적으로 현장으로부터 배제시키고, 작전을 신속하게 종료한 이후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달래려고 했지만 언론의 반발은 극심했다. 언론이 전투지역에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군 당국의 조치는 신속하지 못했고 사실상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언론계의 반발이 심화되자 국방성이 주도하여 'Hoffman 위원회'를 구성했고 언론의 비난을 감안한 중재 노력이 이루어졌다.⁹⁾ Hoffman 위원회는 1990년 3월 언론통제를 완화하는 취지로 17가지 제안을 펜타곤에 제시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였다. 첫째, 작전기획 단계에서부터 공보 관계관이 참석해야 하며, 작전의 민감성을 이유로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보활동에 대해 작전지휘관들이 각종 지원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군내부적으로 지휘계선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장관 수준에서 공동취재단(pool) 제도에 대해 공식문서로 적극 지원 지침을 하달해 주어야 하며, 합참의장도 모든 지휘관들에게 공동취재단에 대한 협조와 에스코트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도록 제언하였다.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콜린 파월이 제언을 받아들여, 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작전기획 단계에서부터 공보작전요소를 우선적 고려요소로 반영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¹⁰⁾ 이러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펜타곤의 대언론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으나 당시 많은 일선지휘관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언론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1990년 걸프전에서는 1980년대와는 다르게 치밀한 언론관리 작전을 전개했다. 군이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영상자료, 전황브리핑 등을 기자들이 받아쓰도록 유도하면서 국민여론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기자들이 가급적 전투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취재단(pool) 기조를 유지했다. 대신에 정밀무기의 타

8) Thomas Rid, *War and Media Operations: The US military and the press from Vietnam to Iraq*, (New York, NY: Routledge), 2007, pp. 72-74.

9) Fred Hoffman은 AP 통신의 펜타곤 기자로 22년간 일했고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국방부 부공보차관보(deputy ASD/PA)를 지냈기 때문에 군과 언론 양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10) Collin Powell, *DoD National Media Pool Planning Requirements*, Directive 182305Z: Department of Defense, 1990.

격 장면 등 영상 위주의 보도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며 브리핑을 활성화하였다. 걸프전 작전을 지휘했던 중부사령부 주관으로 1페이지의 보도준칙과 1페이지의 언론지침(media guidelines)을 마련하여 공동취재단을 구성했다. 걸프전 초기 단계에는 17명의 종군기자를 6명의 공보장교들이 밀착하여 에스코트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고 1991년 12월에는 취재단의 규모가 600명 수준까지 증가했다. 당시 중부사령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란(Dhahran)과 리야드(Riyadh)에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하여 전황브리핑을 활성화하고¹¹⁾ 첨단정밀무기 관련 영상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TV매체의 보도를 이끌어가는 공보작전을 전개했다. 공보장교들이 종군기자들을 에스코트하고 신변안전을 명분으로 사실상 보도검열에 가까운 각종 제재를 가했다. 공보장교들의 취재기자에 대한 에스코트 제도가 전투현장에서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했다. 미군은 보도준칙 준수 여부를 명분으로 작전현장에서 사실상 보도검열을 실시하였고, 공보장교와 기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란의 합동보도본부와 국방부의 공보차관보실을 거쳐 합의를 이루는 방식을 취했다. 공동취재단이 운영된 기간에 취재된 1,300여건의 기사 가운데 불과 5건의 기사만 중간검토과정을 거쳐 국방부차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현장 취재기자들은 보도준칙 준수 여부를 둘러싼 확인을 사전검열로 인식하여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다. 현란한 첨단무기 공격 영상 등에 미국 사람들은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정작 언론인들의 내면적 반발은 컸다. 또한 걸프전을 통해 미래전에서 사실상 보도검열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현장에서 생중계가 가능해진 이른바 ‘CNN 효과’를 지휘관들이 실감하기 시작했다. 당시 합참의장 콜린 파월 장군은 CNN 등 24시간 생중계 뉴스채널의 위력을 중시하고 미군의 작전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시대에 맞도록 언론과 인터뷰를 활성화시켰다. CNN을 위시한 뉴스채널이 독자적인 중계 기술, 역량,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생중계 보도권으로 편입하는 현상에 능동적으로 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 당국의 치밀한 대언론 관리에도 불구하고 걸프전 당시 CNN 등이 실시간으로 호텔 옥상에서 생중계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등장하였고 미국 언론계 내부로부터 조직적인 자성과 반발이 나타났다.¹²⁾ 걸프전

11) 이라크 공격 개시 후 47일 동안 미 국방부에서는 합참의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공보차관보 등이 35회에 걸쳐 언론브리핑을 실시했고, 사우디 현지에서도 중부사령관, 작전차장 등이 98회 걸친 전황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정보제공을 통한 언론의 보도방향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취했다.

12) 걸프전 당시 사담 후세인은 CNN의 중계팀들이 바그다드에 잔류토록 하여 바그다드 공습장면 등의

당시 CNN을 비롯한 미국의 상업방송사들은 미국의 용맹성이나 기술의 잠재성, 흥미로운 전쟁의 자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언론인들은 국방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사전 검열과 풀 기자단 제도 혁신을 요구하는 역풍이 파생되었다.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걸프전이 종료된 이후 군과 언론의 갈등이 양측의 합의로 가까스로 진정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걸프전은 군과 언론의 관계가 새로운 절충점을 찾아서 전쟁보도에 대한 일정한 준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¹³⁾ 미군의 언론관리를 지향한 논리는 '작전 보안(Operation Security)' 유지였다. 진행 중인 작전이나 장차 추진될 작전 기밀이 언론보도를 통해 적에게 노출될 경우 전투 병력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 대언론 설득논리의 핵심이었다. 1991년 1월 14일(작전 개시 3일전) '뉴스매체를 위한 기본지침(Guidelines for News Media)'과 '사막의 방패작전 기본수칙(Operation Desert Shield Ground Rules)'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했다. 두 문건에는 공동취재단(pool) 가입을 의무화하여 현장취재 기자들이 공보장교들의 안내에 따라 취재해야 한다는 점과 위반 시 축출됨을 명기하였다. 또한 공동취재를 통해 작성된 기사는 군 당국의 보안성검토(Security Review)를 받도록 하였다.

1992년 소말리아 파병된 작전(Operation Restore Hope) 당시 언론은 파병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기능(push)과 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기능(pull)을 리드해 나갔다. TV 영상을 통해 굶주림에 허덕이는 비참한 내전상황을 부각하여, 인도적 차원의 파병 결정을 정치권에 압박했고 미군 병사의 시신이 처참하게 모가디슈 시내를 끌려 다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철군으로

촬영을 허가해 주어 현지 생방송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Peter Arnett는 현지사정을 생생한 화면과 함께 위성전화로 보도하여 후세인의 하수인이라는 비난도 받게 되었다.

13) 군의 통제에 대한 언론의 항의로 1992년 일리노이주 Wheaton에서 국방리더들과 언론계 인사들 간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결과 '전투 중인 미국군의 뉴스취재에 대한 9개의 원칙'이 채택되었다. 이 9개의 원칙은 국방부 명령(DoD 5122.5)으로 수용되었다. 이 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은 △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뉴스보도는 취재의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것 △ 이러한 취재보도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Media Pool 제도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 동안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언론인들에 대해 군은 '작전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자격을 인정해 줄 것 △ 군 공보장교들은 언론의 활동에 조력하되 방해하지 말 것 △ 군은 Pool 제도에 속한 언론인들에게 필요한 병참지원을 제공할 것 등이었다.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말리아 사태 당시 미군은 사실상 여론에 끌려 다닌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전투현장에서의 전술적 실수나 상징적 사건이 언론을 통해 확대 보도될 경우 대통령의 전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함을 체험한 것이다.

1998년 코소보전의 경우를 통해 미군의 미디어의 영향력이 미군의 전유물이 아님을 실감했다. 적대세력이 교묘하게 자유세계 미디어를 역이용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심리전에 활용하고 국제여론을 선도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민간인 폭격 등 미군의 실수나 약점을 역이용하는 보도심리전을 전개함에 따른 파급력을 체감하면서 미디어전과 군사작전이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느 일방의 우세만으로 승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확인했다.

2001년 9.11테러 직후에 미국사회가 애국적 분위기 고조된 상태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대한 응징차원의 군사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이 2001년 10월 7일 개시되었다. 알케이다의 은거지를 파괴하고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작전목표는 비밀 특수작전 소요를 급증시켰다. 필연적으로 작전초기에 군과 언론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미군은 탈레반 공격이 이루어지는 작전현장에 취재보도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고, 보도통제를 강화하여 공습개시 20시간이 지난 이후에 첫 방송을 허용할 정도였다. 작전이 진행되면서 통제보다는 공개가 오히려 전략적 목표 달성에 효과적임을 군 당국이 교훈으로 삼았다. 알케이다를 비롯한 테러집단이 자유세계 미디어의 속성을 역이용한 심리전이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한다는 새로운 도전도 확인했다. 이러한 경험이 기초가 되어 공보작전이 작전기획 및 안보전략에 핵심적 고려요소라는 공감대가 펜타곤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기초로 정보작전 교리(Information Operations Doctrine)로 집대성되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라. 이라크전과 임베딩(Embedding) 시스템

미군은 9.11 테러를 계기로 전쟁양상의 변화, 달라진 미디어 환경, 현장 접근 차단 등의 부작용,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임베딩(Embedding)으로 불리는 ‘직접동행취재’ 방식을 도입했다.¹⁴⁾ 2003년 3월에 개시된 이라크전 당시로서는 혁신적 발상이었던 임베딩 프로그램은 국방부 공보차관보 클라크(Victoria Clarke)가 주도하고 린스펠드 국방장관이 호응하여 이루어 졌다. 개전 초에 775명에 달하는 취재보도 인력이 미군 전투부대와 직접동행하며 취재하는 이례적 조치의 배경에는 미군의 다양한 포석이 내재되어 있었다.¹⁵⁾ 전투에 직접 임하는 미군 장병의 눈으로 전쟁을 인식하고 취재보도 하도록 기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전을 지휘했던 군 장성들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비밀회의 등에도 기자들을 참석시키는 등 작전현장 공개가 실시간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전쟁의 양상도 달라졌고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전쟁보도를 ‘효과중심 작전’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라크 전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된 임베딩 시스템은 기자들을 작전부대에 실제로 배속시켜서 작전병력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동행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전에 훈련도 이루어졌다. 미 국방성 종군기자 훈련은 기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군사작전을 보도하는데 필요한 군사지식과 기술을 교육했다.¹⁶⁾ 이라크전 작전지역에서도 종군기자 훈련이 이루어졌다. 일례로 2003년 2월 22일 2일 미·영 연합군/합동 미디어 센터(쿠웨이트 피하힐 힐튼호텔) 설치하여 종군기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등록절차는 신분확인 ⇒ 취재등록/프레스 배지 발급 ⇒ 종군요령숙지, 취재도구 지급의 순으로 이어졌다. 참여대상 종군 기자들에게 탄저균 및 천연두 백신을 접종하는 등 이라크군 탄저균 공격에 대비한 생존 요령 설명도 이어졌다. 이러한 교육 후 2003년 3월 8일 보도지침을 배포하고 일반 수칙(50개조) 이 포함된 서약서 합의문에 서명을 요구했다. 당

14) 임베딩의 외형적 취지는 기자들이 작전현장에 직접 접근하여 체험하면서 사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면적 포석은 군부대의 지원이 없는 전투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특성을 활용하여 군과 언론이 상호 win-win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국에 유리한 국내의 여론을 선도해나가려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된 것이다. 언론이 적의 입장이 아닌 미군의 입장에서 전황을 이해하고 전쟁의 명분을 추적하면서 보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5) Thomas Rid, War and Media Operations: The US military and the press from Vietnam to Iraq, (New York, NY: Routledge), 2007, p. 2.

16) 교육훈련 내용 중에는 ① 미군 지휘계통과 군의 관습, 무기체계의 이해, 핵수칙, 교전 규칙 ② 기본적인 응급처치, 직간접 총격 대응법, 변장술 ③ 가스실(화생방 공격 대처법) 체험 및 모의 전쟁 훈련 ④ 8Km 완전무장(11Kg)행군, 지뢰식별법, 헬기 타기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시 쿠웨이트에는 임베딩 프로그램에 참가한 529명 등 2074명의 종군 기자들이 이라크에 진입할 준비를 했고, 종군기자 10여명 사망·실종되는 사례가 발생했다.¹⁷⁾ 임베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른바 일방주의 취재진(unilaterals)의 숫자도 2,000명이 넘어서는 등 전쟁역사상 최대의 기자들이 참여하여 전투의 세부적 사항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미디어 전쟁이 피아양측에 의해 엄청난 규모로 치러졌다.

군은 취재보도진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대신에 ‘기본수칙(Ground Rules)’에 동의하도록 하는 한편 신변안전을 명분으로 현장에서 군의 통제를 따르도록 요구했다.¹⁸⁾ 기본수칙의 핵심논리는 ‘장병과 동행취재진의 안전과 작전보안 유지’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이었다. 이 수칙은 임베딩 시스템에 동참하는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전지역으로부터 퇴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은 “언론이 군사작전을 취재 보도할 권리를 인정하되, ‘신변안전과 작전보안’을 위해 기본적인 수칙에 협조하라”는 고도로 기획된 언론대책이나 다를 바 없다.

일부 종군기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생생한 전투현장에 대한 접근 자체를 허용하는 점에 대해서 개전 초기에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군 당국은 부정적 비판 기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기자들의 현장취재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기자들이 장병들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애환을 이해하는 부수적 효과도 고려되었다.¹⁹⁾ 각 언론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특파원을 작전현장에 파견하여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동참요인이다.

17) 2003년 3월 20일 - 5월 1일 기간 중에만 실제로 동행취재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기자 4명이 전투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기자들의 신변안전 문제는 군 당국과 언론사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18)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Public Affairs, “Public Affairs Guidance on Embedding Media During Possible Future Operations/Deployments in the U.S. Central Commands Areas of Responsibility,” Feb. 10, 2003.
Available at (<http://www.dod.mil/news/Feb2003/d20030228.pdf>)

19) 1973년 스웨덴에서 발생한 인질사건을 계기로 일명 ‘Stockholm Syndrome’으로 지칭되는 현상이다. 인질이 인질범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오히려 인질범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현상처럼 기자들이 전투 중인 장병과 숙식을 함께 하며 동행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의 생각을 이해하여 취재보도에 반영되는 현상이다.

2003년 미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의 동행취재 기자들에게 적용했던 ‘취재기본 규칙(Ground Rules)은 ‘인터뷰 원칙, 무기 소지 금지, 등화관제, 작전보안을 위한 엠바고, 공개 가능한 정보사항 14가지, 공개금지사항 19가지, 전·사상자 보도지침 9가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되어 있다. 이 중 보도금지사항으로 인식되어 논란이 되었던 ‘19가지의 비공개 사항’은 ‘병력, 항공기, 무기체계의 특정한 수량, 작전계획이나 공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군부대의 위치를 드러내는 정보’ 등 신변안전과 작전보안 유지에 필수적으로 요망되는 사항들이다.²⁰⁾ 일부 취재기자들이 ‘취재보도’가 아니라 ‘고도화된 선전’에 동원된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생생한 전투현장에 대한 접근 자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2003년 이라크전 보도에 대한 비판은 전황 중심의 스포츠 중계식 보도, 심층적인 보도의 부족, 전자게임을 연상케하는 화면으로 전쟁을 극화된 편집 등 다양하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이 고도로 기획한 대언론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라크전 종료 후 뉴욕타임즈 신문이 2003년 이라크전 관련 보도를 사후 평가해 본 결과, 이라크 침공 초기에 비판적 시각의 보도가 적었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현장에 투입된 기자들이 장병의 시각에서 전쟁을 바라보고 취재 보도한 기사량이 실제로 증가한 반면, 민간인들이 겪는 전쟁피해의 관점을 다룬 기사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군은 임베딩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언군관계의 오랜 줄다리기(historical tug-of-war between the press and military)’에서 전략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¹⁾ 군관계자들이 언론의 동행취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기획이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전쟁의 핵심적 명분으로 활용했던 당시의 논리가 종전 이후에 사실과 다른 결과로 귀결됨으로서 미국이 국제사회로

20) ① 군단/원정군 이하 제대의 구체적 병력 수 ② 항공원정비행단 이하 제대의 구체적 항공기 대수 ③ 구체적 장비 및 핵심보급물자 수량 ④ 항모전단 이하 제대의 구체적 함정 대수 ⑤ 군사기지의 위치 및 명칭, 영상자료(국방부 차원 공개 승인 시만 허용) ⑥ 장차작전에 대한 정보 ⑦ 기지 및 주둔지의 방호대책 ⑧ 군사시설 및 주둔지 안전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영상 ⑨ 교전규칙 ⑩ 정보수집 관련 기술·기법·절차 등 ⑪ 기습작전 효과를 방해하는 보도(생중계 등에 의한 작전방해 각별히 유의) ⑫ 작전보안과 생명을 위협하는 ‘우방군 기동, 전술적 전개 및 배치’ ⑬ 특수전부대 정보, 독특한 작전수행 방법론, 전술(예 공중작전시 공격각도 및 속도, 해군의 전술 회피 기동 등) ⑭ 적 전자전의 효과 관련 정보 ⑮ 연기된 작전 또는 취소된 작전 관련 정보 ⑯ 구조작전이 전개 중이거나 계획된 ‘실종/격추된 항공기·선박’에 대한 정보 ⑰ 적의 ‘위장·엄폐 목표선정·직간접사격·정보수집·보안조치’효과에 대한 정보 ⑱ 적의 포로·억류자의 얼굴/인식표/기타 신분확인 가능 사항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 ⑳ 구금작전·구금자인터뷰를 포함한 사진이나 영상.

21) Andrew Lindner, “Controlling the media in Iraq,” Contexts Vol. 7, No.2, pp 32-38, Spring 2008.

부터 받은 역작용은 '언론의 진실추구'라는 근원적 문제를 반추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 최근 미군의 대언론 관계 지향점

위에서 미군이 베트남전의 교훈을 발판으로 그레나다, 파나마, 걸프전, 소말리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임베딩 시스템으로 변모해온 과정을 고찰했다. 2013년 현시점에서 바라보면 이라크전은 이미 10년 전의 상황이고 그동안 미디어 환경은 격변했다. 모바일 스마트폰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연결되어 융합미디어의 총아로 떠오르고 전쟁이나 재해재난의 현장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시대가 되었다. 소셜미디어의 생활화로 뉴스의 소비자에 머물렀던 개인들이 뉴스 생산 및 확산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며 전쟁을 전자오락이나 게임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높아졌다.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이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고 설파한 것처럼 소셜미디어의 특성 자체가 소통의 내용에 영향을 주며,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²²⁾

미군은 미디어 환경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효율성 증진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보시스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단행했다. 미 국방부 산하에 '국방미디어활동본부(Defense Media Activity)'를 새로 조직하여 그동안 국방부 및 각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각종 미디어 활동을 통합했다. 메릴랜드 주 포트 미드(Fort Mead)에 신축한 본부 건물에 2011년 10월 정식으로 입주한 DMA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의 각종 매체는 물론 국방공보학교까지 총괄한다. 또한, DMA는 국방부 공보차관실의 지침에 따라 미디어 플랫폼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기능도 담당한다. 즉, 이곳에서 전통적 매체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실행기능을 조종·통제하는 것이다. DMA의 임무 영역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국방성 산하 내부 소통에 역점을 둔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들을 향한 소통이 아니라 미군 현역, 예비역 및 군인가족을 포함한 국방 커뮤니티 내부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22) Marschall McLuhan & Quentin Fiore, *The Medium is the Message: An Inventory of Effects*, (New York:: Bantam Books), 1967.

활동에 역점을 둔다. 활동 방식에 있어서는 뉴스, 정보, 오락(entertainment)을 적시적절하게 혼합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²³⁾ 미군은 전쟁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응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미군 공중폭격이 옳으며, 이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이 죽었다”는 탈레반 측 주장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한 정확한 폭격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군 지휘관이 전투현장을 방문할 때 페이스북을 통해 장병들에게 토론 및 제안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통의 활성화 및 저변의 군심파악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미군은 소셜미디어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부대별 공식 SNS 활동을 통해 부대원 관리 및 홍보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SNS 사용 시 유의점 및 제한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미군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SNS 활용도는 증진하되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군은 소셜미디어 활용전략을 국방 커뮤니티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국민을 향한 직접소통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현역군인, 군무원, 군인가족, 예비역에 이르기까지 국방 커뮤니티 개념의 단계적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미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위키리크스(WikiLeaks)의 기밀 폭로를 계기로 미국에서 ‘국가안보와 언론자유’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외교국방 분야 비밀전문 26만 건 이상을 유출한 파문²⁴⁾ 이후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와 ’모를 권리(public's right not to know)’에 대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져올 기밀이 범지구적 사이버 공간에 난무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인터넷 생활화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으로 미국 정부 당국이 뉴미디어에 의한 기밀유출의 파장을 체험했다.

또한 2011년 5월 1일 오사마 빈라덴 살해 작전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치밀하

23) Defense Media Activity의 임무 및 세부적 활동은 홈페이지(<http://www.dma.mil/>)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24) 미 육군 정보분야 병사인 Bradley Manning이 국무부와 국방부 간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설치된 비밀자료네트워크(Secret Internet Protocol Router Network)를 통해 26만 여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사건이다. 그는 2010년 5월 구속되어 군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게 기획·반영한 대표적인 전략커뮤니케이션 작전이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특수부대 Navy Seal의 빈 라덴 은신처 급습작전을 지켜보는 오바마 대통령 및 참모진의 사진이 전 세계 주요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다. 백악관은 현장의 군사작전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시청하면서 일련의 작전과정에 대한 자료를 기밀로 분류하여 대외공개를 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장면을 담은 사진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등 이슬람 세계의 여론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한 메시지 전략을 구사했다. 일부 언론이 자료 공개를 요구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정부는 국익 및 안보차원에서 기밀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가안보국(NSA)의 비밀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²⁵⁾ 사태는 전쟁보도와 맥락은 다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국익수호와 언론보도의 논의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가안보 차원으로 합리화해 왔던 각종 비밀 정보활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적 권익이나 가치와 충돌할 때 어떠한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던져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익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여타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현상을 어떻게 비교형량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다.

바. 미국의 경험을 통한 시사점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해왔고 ‘군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와 제도화 조치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기본적으로 미군은 국내외 여론을 국익에 유리하도록 유도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접근했다. 미국의 전쟁보도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때 유념할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적 안보위기 상황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자국의 본토가 아닌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했고, 군과 언론의 조직문화가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언론이 전쟁보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25) 2013년 11월 현재 러시아에 망명중인 스노든은 CIA와 NSA에서 일했던 컴퓨터 기술자다. NSA의 다양한 비밀감청 및 도청 활동을 언론을 통해 단계적으로 폭로하여 국제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제도적 견제를 받았지만, “자유롭되 책임 있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처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존재하는 경우에 취재보도를 제한할 수 있음에 대한 공감대가 기초가 되었다.²⁶⁾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9.11테러와 같이 본토가 대규모 테러공격을 당하는 비상상황에 직면하자 정부와 군의 잘못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지원하고 국민을 결집시키는 애국적 보도에 앞장섰다. 언론인들이 ‘건전한 의심(healthy skepticism)’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적 동반자(partners in patriotism)’라는 인식에 공감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아닌 평시에도 언론의 취재보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President's Executive Order No. 12958)에 의거하여 ‘군사계획, 무기 또는 작전, 첩보수집 행위, 핵시설 안전 프로그램’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밀에 대해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한다. 정부나 군의 기밀 분류가 과잉조치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미 의회는 정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비밀분류 자체가 적절한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국의 전쟁보도 관련 언론정책 변천 과정을 고찰한 결과 식별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에게는 베트남전의 충격이 컸고, 언론에게는 9·11 테러를 당한 충격이 컸다. 자국의 본토가 직접 공격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하자 언론은 애국심을 결집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향한 일방적 침공전쟁을 정당화시켰다. 언론이 국민적 응징결의를 한데 모으고 ‘애국법(Patriot Act)’을 통과시키는 여론형성을 선도해 나갔다. 미국의 유력 언론은 대규모 테러공격을 당하는 비상상황에 직면하자 정부와 정보당국, 군의 잘못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국민을 결집시키는 애국적 보도에 앞장섰다.

둘째, 전투작전 상황에 대한 취재보도일 경우에는 ‘취재보도기본수칙(Ground

26) 동 원칙은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동시에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언론자유를 제한 한다’는 미연방 대법원의 판례(1919년 Schenk 사건)에 기초를 두고 1940년대 이후부터 통용되어 온 기준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홀즈(Oliver Wendell Holmes) 판사는 제1차 세계대전 와중에 군 징집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인물을 뿌린 Schenk를 ‘군징집 방해 음모죄’로 유죄를 확정시키며 유명한 ‘Clear and Present Danger’ 논거를 제시했다.

Rules)'을 철저히 준수한다. 군은 군사작전을 취재할 언론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적을 이롭게 하거나, 자국 군대나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도금지를 명시한다. 미군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타인지 부정적이거나 당혹스러운 취재보도를 막으려는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언론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취재기자 자신이 동의하고 사명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엄격히 적용된다.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신중한 보도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이를 준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넷째, 미군의 임베딩 시스템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언론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언론인과 군인이 상호간에 높은 수준의 신뢰를 쌓아 가면서 '진실추구와 전쟁승리'의 공존을 모색하지만 근원적 갈등요소는 항상 내재해 있다.²⁷⁾

다섯째, 펜타곤의 리더들은 언론을 더 이상 기피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언론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군과 언론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채널을 형성하는 데 예비역 장군들이 현역군인과 언론인을 연결하는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미국의 대언론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었던 'Sidle 위원회'의 Sidle 장군도 예비역 소장이었다.

여섯째, 최근에 위기발생 초기 대응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단순한 정보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정보를 송출하는 것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조치로 평가된다.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군 당국이 침묵하거나 대응이 늦어질 경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27) Dan Rather, "Truth on the Battlefield: Between News and the National Interest,"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23, no. 1., May 6, 2006. (<http://hir.harvard.edu/media/truth-on-the-battlefield>).

IV. 국가안보 위기시 언론보도 조화 방향

가. 천안함·연평도 사태 취재보도 경험 재조명

천안함 폭침 사건은 초기단계부터 5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벌였고, 함정 침몰원인을 규명하는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다.²⁸⁾ 인터넷 생활화 시대에 발생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정보유통 질서가 표출되었다. 정보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 역할을 한 네티즌들의 추정된 의견이 사실과 혼란스럽게 뒤섞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취재인원을 대폭 보강하는 과정에서 평소 국방안보 분야를 취재한 경험이 없는 기자들이 포함되어 주로 현장 리포트를 담당했다. 언론의 취재보도 행태를 일반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체별 특성 및 이념적 성향,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논조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식별된 한국 언론의 취재보도 관련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군의 작전실패를 비판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세부적 해군작전, 서북도서 경계실태, 북한군 통신 사항까지 포함되는 등 군사기밀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었다. 사건발생 시간, TOD 영상 공개, 침몰원인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은 근거 없이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우리 군의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에 군사보안을 이유로 TOD 영상 등 정보를 차단했다가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추가 공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밀보도를 통제할 명분을 상실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자에 의해 작전 관련 기밀이 노출된 측면도 있었다.²⁹⁾

둘째, 안보 위기 상황이 촉발되었을 때 “언론이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고, 군은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군이나

28) 국방부에는 평소 26개 매체 36명의 취재인원이 상주하지만,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100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41개 매체 200여 명, 백령도에 37개 매체 170여 명, 국군통합병원에 8개 매체 40여 명 등 총 500여 명에 달하는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벌였다.(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2011년 3월, p.192.)

29) 2010년 4월 5일 국방부가 공개한 ‘천안함 관련 설명자료(2)’에는 △ 해군 76mm, 40mm 함포 유효사거리 △ 속초함 사격통제 레이더의 탐지거리 △ 대잠초계함 소나(음향탐지기) 적 잠수함 탐지능력 등과 관련해 그림까지 곁들인 자세한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 언론이 이러한 선례를 들어 군사기밀 보도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았다.

언론에서도 비상사태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누가-무엇을-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로 인해 사태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군관계자와 취재기자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었다. 취재기자들은 군함이 침몰한 사건 자체의 특성상 정확한 사실 확인이 곤란했던 초기대응을 군이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몰아갔고,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당국의 발표에 대한 의혹제기 보도가 이어졌다. 사태 발생 초기 메시지 관리가 미흡하여 군이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군 당국이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문제가 발생했다.³⁰⁾ 언론은 국회 브리핑 내용을 인용 보도하는 형식으로 민감한 군사기밀 사항까지 상세하게 보도 했다.³¹⁾ 특히 우리 군의 대북 정보수집 방법, 정보수집 능력 등에 관한 사항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은 우려할 만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넷째, 취재보도진이 전문적 군사작전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오보, 왜곡·과장으로 이어지는 보도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일반 전문가들의 추정·예단·견해 등이 여과 없이 보도되어 논란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었다. 뒤늦게 결정적 증거들이 포착되면서 보도방향이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섯째, 천안함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진 주변적 사항을 부각하거나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군부대와 갈등적 차원에서 보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건의 본질적 진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주요 뉴스로 처리하는 성숙치 못한 보도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여섯째, 군 당국의 대언론 정보제공 창구가 체계적으로 통합되지 못했다. 언론의 취재보도가 다양한 출처를 통해 분산됨으로써 일관성을 상실하거나 혼란스

30)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본회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등에 보고 및 질의·응답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대군 불신을 증폭시키거나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문제를 야기했다.

31)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과정에서 국회를 통한 군사기밀의 무분별한 노출이 문제가 되었다. 일례로 김00 의원은 2010년 4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잠수함의 일자별 기동 횟수’ 등 미군의 위성 사진과 북한군 통신사항을 통해 특수정보(SI)로 취득한 기밀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려움을 증폭시켰다. 특히 ‘작전현장-합참-2함대사-공보라인(대변인실)’ 간의 내부적 정보공유 및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마치 군 당국이 의도적으로 ‘말을 바꾸는 것’으로 오인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초유의 군함 피격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통합적 언론관리가 어려웠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국방부 및 합참의 ‘언론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위에서 제시된 취재보도 관련 문제점들의 근원을 따져 보면, 천안함 피격사건은 사건발생 초기의 제반 여건상 사실(Facts) 확인이 구조적으로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추측보도 및 오·왜곡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많았다.³²⁾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한반도 정세에 격랑을 몰고 왔으며 국민들이 안보현실을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격 도발 이후 평균적으로 40여 명의 기자들이 연평도 내에 상주했으며 12월 20일에는 1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벌였다. 연평도 포격 도발 취재보도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사태발생 초기의 메시지 관리, 군의 즉응태세 적정성 논란, 대언론 발표 일관성 시비 등’에 휩싸여 언론을 이끌고 나갈 여력이 없었다. 서해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국제적 외교심리전까지 복합되는 와중에 일부 언론은 군사력 배치현황과 장비성능, 정보작전태세 현황과 문제점, 유무선 통신능력 등 군사기밀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가 하면, 오보·왜곡·과장보도로 점철된 속보경쟁을 지속했다. 대한민국 영토가 직접 적의 포격을 당하는 상황 하에서도 우리 군의 대응 잘못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TV 방송이 우리 군의 취약점에 대한 그래픽 해설까지 곁들여 실시간 스포츠 중계하는 현상은 언론계 내부에서조차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연평도 현장에 대한 취재기자 ‘접근 통제’는 군과 언론의 핵심적인 쟁점요인이 되었다. 포격 도발 발생 직후 다양한 정보유통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모습이 영상으로 전파되고 내외신 취재진들

32)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p.201.

33)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2011년 6월에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민 안보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여론조사에서 청소년(중고생)의 78.7%가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이 2010년 6월에 비해 높아졌다. (여론조사 결과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이 연평도 현장에 운집하여 통제 곤란한 규모가 되면서 군 공보요원들과 현장 취재요원들의 실랑이가 심화되었다.

군과 언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취재보도 과정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국가안보와 기밀보호를 위해 군과 언론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였다. 특히 연평도와 같이 육지로부터 격리된 서북 도서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 군장병, 취재진이 공동운명체로서 신변안전 조치가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을 체험했다. 연평도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기자들의 증언에 의하면,³⁴⁾ 외신기자들은 방탄복을 입고 취재를 한 반면 국내 기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조치 없이 취재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 언론사들의 위험지역에 대한 보도 준비는 아직도 허술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이동수단, 숙식, 취재장비 관리 등 실질적 경험을 하면서 미국의 직접동행 취재(Embedding) 프로그램에 준하는 상세한 절차와 취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³⁵⁾

나. 문제점 및 교훈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와 언론보도’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군)의 사태 발생 초기 대언론 메시지 관리가 미흡하여 혼선이 가중되었다. 두 사건 모두 사실관계 확인 및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은 국방부 차원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청와대 및 관계부처의 공조에 이르기까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신뢰를 주지 못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군 당국의 브리핑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건발생 시간, 동영상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표한 것은 불신을 키우는

34) 2010년 11월 26일 촉발된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의 긴박함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2010년 12월 2일 방송기자연합회 회의실에서 방송기자 및 전문가들의 특별좌담(연평도가 던진 과제는?)이 이루어졌다. 동 좌담회에서 전쟁에 준하는 비상상황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과 발전방안들이 진솔하게 논의되었다.

35)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으로 2010년 12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전시·비상상황에서의 취재보도 준칙’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 전·현직 언론인 모두가 세부적인 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요인이 되었다.

둘째, 언론은 국가안보 위기시 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이 없이 치열한 보도경쟁에 매달리는 양상을 보였다. 각 언론사별로 많은 취재인력을 투입했지만 현장 접근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자 각 언론사 데스크에서 취재기자들을 압박하고,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군 당국에 대해 항의한 경우가 잇따랐다. 언론사별로 정보획득을 위해 가용방법을 총동원하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에 근거하여 확인취재에 매달리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셋째, 언론보도에 따른 군사기밀의 누설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서북도서 지역의 상세한 작전개념, 작전계획, 구체적인 무기 및 장비 배치, 군의 취약점까지 상세하게 노출되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군사기밀의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군의 자의적 적용소지 때문에 언론자유가 위축된다’고 지적한다.

넷째, ‘작전현장 접근’을 둘러싸고 군 관계자들과 현장취재기자들의 갈등이 문제가 되었다. 작전현장에 대한 취재기자들의 접근을 언제,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선을 초래한 측면이 많았다. 취재기자들이 작전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군의 공식적 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국방부(대변인실)의 적극적인 판단 및 조정기능 발휘가 요망된다.

다섯째, 작전현장의 취재보도 인력이 신변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치열한 보도경쟁에 휘말린다.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장병은 신변위협에 노출되지만 대비태세도 철저하다. 반면에 취재보도진은 신변안전이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무시되거나 미흡하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수백 명의 취재인력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TV 방송의 경우 기술지원 및 장비운용 인원까지 폭주하여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주로 사회부 신임기자들이 군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아무런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현장에 투입됐다.³⁶⁾

36) 방송기자연합회에서 2010년 12월 2일 개최한 특별좌담(연평도가 던진 과제는?)에서 취재진들이 느낀 신변위협과 혼란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논의가 있었다.

여섯째, ‘어디까지가 언론인가?’를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1인 미디어’에 가까운 인터넷, 모바일통신, 동영상 등이 이념적 편향성을 갖고 여론몰이에 참여·개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에 혼란현상이 초래되었다.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가 확산시대에 겪은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정부(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역량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체험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개인이 전국 각지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위기상황 발생 시 상징적인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 조화방향 및 실천과제

앞으로 안보 위기 상황이 촉발되었을 때 “군과 언론이 ‘무엇을, 어떻게, 왜’ 협조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공동노력의 시발점은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이 촉발되었을 때 군과 언론이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인정하지 못하면 합리적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 핵심적 관건은 “과연 작전현장에 투입되는 언론매체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언론은 안보 위기를 뉴스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특종보도와 속보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작전보안이나 기밀보호는 뒷전으로 미룰 개연성이 크다. 취재보도 경쟁에 몰입하다 보면, 언론 역시 본의 아니게 적을 이롭게 하는 작전기밀 누설, 장병 및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고 언론과 군의 입장이 흑백논리처럼 배치되는 측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감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밑바탕에는 ‘국가안보 동반자’ 인식이 깔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2년 9월 24일 국방부 장관과 한국기자협회장이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에 공동 서명하는 성과를 이룩해 냈다.³⁷⁾ 당초 군과 언론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

37) 부록에 ‘국가안보 위기 시 군 취재·보도 기준’ 원문을 수록하였다. 동 기준이 제정되기 까지 국방연구원 정책과제 연구 및 발표, 간담회, 국방부출입기자 워크숍, 자문단회의, 토론회, 문안 검토 작업

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진지한 자세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言軍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로 삼을 만한 결실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군의 작전보안은 상충적 모순관계가 아니라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양 집단이 상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는 마인드로 접근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기준에는 군은 언론의 효율적인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언론이 작전보안을 위해 협조할 내용이 실천수칙 형식으로 명료하게 제시했다. 이 기준이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가치를 넘어서 국가안보 위기가 촉발되었을 때 작전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준칙을 마련하는 한편 군과 언론의 협조시스템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식별되었다.

한국의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에 보도금지 사항을 강요하면 언론의 자발적 협조를 얻기 어려운 한국의 언론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칭 ‘국방언론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 위원회는 군, 언론, 학계, 유관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서 창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위원회를 군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경우 통제차원의 목적이 내재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평시부터 국방과 언론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자율적 협의체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군의 미디어 교육 및 언론의 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상호 교환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의 경우 군인의 언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방공보학교(DINFOS)’를 별도로 운영하여 국방부 및 각 군에 근무하는 정훈공보장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에 관련된 브리핑, 인터뷰 등 다양한 기량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등 12회에 걸쳐 공감대 형성 활동이 추진되었다.

깊은 이해력을 쌓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득하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SC) 차원의 능력도 배양하는 종합 미디어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군도 국방부 주관으로 종군기자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2003년 2월 21일 특전사 교육단 정신교육관 주관으로 중앙언론사 기자 60명을 대상으로 신변안전과 개인적 방어 요령 등을 교육한 바 있다. 현지정세/문화관습, 전장지역 취재경험소개, 국제법/교전규칙/제네바협정, 국제법/교전규칙/제네바협정, 걸프전 파병 경험담, 화생방/풍토병/개인방호 우발상황 조치요령 등을 교육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방부 대변인실에 주관으로 검토, 추진 중인 '국방 미디어센터' 신설을 조기에 달성하여 이를 '군과 언론'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성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센터가 신설되면 군 장교들에게 언론매체의 특성과 브리핑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시뮬레이션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디어 센터'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언론인의 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재교육 프로그램과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미디어센터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망된다.

V. 결 론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 안보환경은 미디어의 영향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다. 2010년에 촉발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도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보완하는 한편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되는 등 군사적 대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한국 언론에게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인식하는 계기였다. 언론의 취재보도가 위기극복, 군사 작전수행, 국민 안보의식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안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취재보도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경시하는 문제점이 식별된 것이다. '국가안보위기 발생 시 군사작전지역에서 언론의 취재보도 이 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의 공감대가 언론계 내부에서도 형성되었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 안보위협과 미디어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군과 언론'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군사작전 지역에서의 보도준칙을 마

련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9월 24일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에 국방장관과 한국기자협회장이 공동 서명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기본 방향은 국지도발 같은 비상사태 시에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하되 작전보안을 유지하고 작전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취재보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국방과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협조시스템의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도전요인이다. 국방안보 분야 리더들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견지해야 한다. 국방현안에 대한 이슈관리와 위기관리는 물론 전시에도 각종 미디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대군신퇴를 증진하고 안보의식을 드높여야 할 것이다. 언론인들 역시 안보 위기 사태는 작전보안 및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신중하고 사려 깊게’ 취재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언론과 군의 갈등에 따른 피해는 곧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북한 및 주변국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쟁보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얻은 핵심적 시사점이기도 하다. 미군은 숱한 전쟁을 치르며 ‘군과 언론’ 관계를 재정립하며 변화 발전을 모색해 왔다. 결정적 분수령은 베트남전이였다.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TV매체를 중심으로 한 반전여론의 위력을 실감하고 군과 언론 관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쳤다. 9.11테러를 당한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직접동행취재(Embedding)’ 방식을 적용하여 기자들이 전투현장을 직접 경험토록 허용하여 전쟁 지지 여론을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투현장에 투입된 기자들은 ‘취재 기본수칙(Ground Rules)’에 동의하며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전투원의 입장에서 전쟁을 보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부에서는 ‘보도’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선전’이었다고 비판한다. 시각과 입장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지만, 전쟁보도 상황에 직면하여 기자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하면서 군이 요구하는 작전보안을 준수하는 조화를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언론의 취재보도는 뉴스가치를 지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당시의 제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지고 현실적 장애요소도 많다. 전쟁보도나 안보위기 관련 뉴스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군과 언론이 서로 상대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를 쌓아 가면 국가안보에 실효적 가치가 크다. 앞으로 국가안보 위기가 촉발되었을 때 군의 전향적 취재지원과 언론의 자발적 협조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며 사명이다. 군은 더 이상 언론을 차단 또는 통제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이 국가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의 주역들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도전요인을 안보자산으로 승화될 수 있다. 군과 언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견지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재범 & 문성철, “국가안보와 언론자유 세미나: 천안함 사태 언론보도 진단과 개선방안”, 한국논단 2010년 7월호, 128-141.
- 김철우, “북한의 미디어 심리전 실태와 대응방향”, 국방저널 423호, 2009년 3월호, 42-45.
- 김철우 외, 군 비상사태시 취재 및 보도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 2011년 6월.
- 박현수, “언론보도에 나타난 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천안함 폭침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65호(2011년 봄), 89-114.
- 방송기자연합회, 특별좌담: 연평도가 던진 과제는? 2010년 12월 2일.
- 방송기자연합회, “긴급진단: 연평도 도발과 전쟁 저널리즘”, 방송기자 2010년 송년호.
- 손태규, “군사정보공개 및 보도제한의 적법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54-81, 2007년 4월.
- 송종길, 전쟁취재보도의 한계와 문제점, 관훈저널, 통권 87호, 11~18, 2003.
- 안민호, 전쟁 저널리즘의 몇 가지 쟁점들: 이라크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교육과학연구, 6권 2호, 47-62, 2003.
- 안보경영연구원(SMI), 전시 국방 공보체계 정립, 연구보고서, 2009년 12월.
- 육군본부 공보실, 군과 언론, (서울 : 정문사), 1993년 10월.
- 이준희, 어색한 ‘국익과 보도’ 논쟁, 한국일보 칼럼(2011년 2월 24일).
- 이창호 외,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여건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0호, 2007년 겨울.
- 안철현, “‘국가적 위기상황’ 하에서의 대공중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천안함 사태를 중심으로,” 2010 국가위기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60-279, 2010년 7월.
- 윤영철, “비상상황 보도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긴급토론회(전시-비상상황에서의 취재보도 준칙) 자료집, 2010년 12월 20일.
- Barstow, David, “The Message Machine: Behind TV Analysts, Pentagon’s Hidden Hand,” New York Times, April 20, 2008.

- Belknap, Margaret H., "The CNN Effect: Strategic Enabler or Operational Risk?," *Parameters*, vol. 32 no. 3, 2002.
- Department of Defense, "Pentagon Embedding Agreement," Feb 23, 2003.
-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f the CJCS Media-Military Relations Panel(Sidle Panel)," August 23, 1984.
- Fiedman, Paul, "The Real-Time War, TV: A Missed Opportunity," *Columbia Journalism Review*, May/June 2003.
- Hess, Stephen and Marvin Kalb (Eds.), *The Media and the War on Terrorism*,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 Lindner, Andrew, "Controlling the media in Iraq," *Contexts* Vol. 7, No.2, 32-38, Spring 2008.
- Maltby, Sarah, *Military Media Management: Negotiating the 'Front' line in Mediatized War*, (New York, NY: Routledge), 2012.
- McKenna, Sean S., "Breaking News: A Study of the Effects of Live Television News Coverage During Armed Conflicts," (Wright-Patterson AFB, OH: Air Force Institute of Technology), 2003.
-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Public Affairs, "Public Affairs Guidance on Embedding Media During Possible Future Operations/ Deployments in the U.S. Central Commands Areas of Responsibility," Feb. 10, 2003.
- Paul, Christopher, *Strategic Communication: Origins, Concepts, and Current Debates*, (Santa Barbara, CA: Praeger), 2011.
- Rather, Dan, "Truth on the Battlefield: Between News and the National Interest,"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23, no. 1., May 6, 2006.
- Rid, Thomas, *War and Media Operations: The US Military and the Press from Vietnam to Iraq* (Routledge), 2008.

- Schoenfeld, Gabriel, *Necessary Secrets: National Security, the Media and the Rule of Law*,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2010.
- Sweeney, Michael & Roy Gutman, *The Military and the Press: An Uneasy Truc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06.
- Wright, Richard K., *Assessment of the DoD Embedded Media Program*,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paper P-3931, Sep. 2004.

부 록 : 국가안보 위기시 취재보도 기준(2012년 9월 24일 서명)

【서 문】

이 기준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외부세력 침입으로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등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과 군이 갈등 소지를 방지하고 양측의 원활한 협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보도 행위와 군의 국가보위 및 국민 보호 임무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군은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은 국가안보와 작전에 임하는 장병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각 언론사는 군 작전지역 등 위험지역 취재 시 군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군은 취재진의 안전한 취재활동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 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외부세력 침입 등에 의해 군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의 작전을 보장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취재 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실천요강을 제공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군은 물론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사와 회원, 작전지역 취재에 참여하는 모든 매체에게 적용된다. 다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신에 대해서는 한국기자협회가 외신기자협회에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구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국가안보위기'란 북한 및 외부세력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여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군의 취재보도 지원 및 정보 공개

제4조 (취재지원 원칙) 군은 비상상황과 관련한 정보가 '사실에 입각하여, 신

속하고, 정확하게'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언론의 취재 및 보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 (신변안전 대책) 작전지역 부대는 취재 보도진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제6조 (작전지역 출입) 군 작전지역에 출입하는 취재진은 군 당국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출입등록을 하고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정보제공방법) 군은 국민들에게 브리핑, 보도자료 등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가용 여건을 고려 작전 현장 부근에 보도본부를 설치해 취재 및 보도를 지원한다.

제3장 언론의 취재보도 준수사항

제8조 (군사기밀 보호) 언론은 작전상황과 관련된 장비 배치와 수량, 군부대의 특정한 위치를 드러내는 정보나 사진, 적 정보수집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이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제9조 (통제구역 준수) 취재진이 작전 현장에 대한 취재를 할 경우 작전부대에서 제시하는 접근 통제선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안전조치 협조) 군과 언론사는 현장 취재진의 안전대책 강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작전현장 갈등 조정) 군 작전 현장에서 군 관계관 및 취재보도진 사이에 갈등이나 마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과 언론이 국방부 대변인실과 해당 언론매체 담당데스크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강구한다.

제4장 전·사상자 보도 및 행정사항

제12조 (인권 존중 보도) 군 작전 수행 중 전·사상자, 입원환자, 가족 및 장례 등에 관한 취재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고 송고한 희생이 폄훼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 (보호장비 대여 및 비용부담) 군은 취재진의 신변안전을 위한 보호장비를 대여하거나 대피장소 및 숙식, 이동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기본적 이동수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숙식에 따른 경비와 추가적인 장비운용에 따른 비용은 해당 언론사에서 부담한다.

【실천수칙】

- ① 군은 비상상황 발생시 '사실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브리핑을 한다.
- ② 군은 현장취재가 승인된 취재보도진의 신변안전을 위해 최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 ③ 군은 비상상황 조치의 일환으로 필요시 현장보도본부를 설치하여 브리핑 및 취재활동을 지원한다.
- ④ 언론은 진행 중인 작전사항, 작전계획, 기밀사항은 사전에 동의한 절차와 현장 작전 부대가 요청하는 취재기본규칙(ground rules)을 준수한다.
- ⑤ 언론은 현장취재나 브리핑이 있을 때 군 당국이 정한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한다.
- ⑥ 언론은 작전 현장 여건에 따라 공동취재단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취재단은 국방부 출입등록매체를 중심으로 한다.
- ⑦ 언론은 작전 중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희생이 폄훼되지 않도록 보도한다.

2012년 9월 24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관진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률

지 정 토 론

◆ 박 현 채 (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주제 발표 논문에 나와 있듯이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보도를 둘러싸고 군과 언론이 갈등을 빚어왔고 양 집단의 여망을 수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 6.25전쟁을 제외하고는 전쟁 당사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우리 언론과 정부에게는 미국의 다양한 시도가 참고해야 할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군과 언론은 그 특성상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둘 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군은 기밀보호, 즉 안보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에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개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국가이익과 진실보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숙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나 고도의 국가안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이익과 진실보도 문제가 충돌하게 될 경우 우선순위와 한계를 규정짓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익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하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단순히 국익 신장을 위해 발발했느냐, 아니면 자유와 민주정의를 위해 발발했느냐에 따라 언론의 전쟁 보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당사국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 등, 해당 국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는 더욱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국익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불가침이라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통설로 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5년 5월 21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포탄의 비극’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영

국군이 사용하는 포탄에 불발탄이 많아서 독일군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을 담고 있었으나 다른 언론사들은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영국군 지휘부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왜곡보도”라며 기사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군 당국의 해명성 발표에 접한 국민들은 데일리 메일이 이적행위를 했다면서 불매운동과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50세였던 노스클리프(Northcliff) 데일리 메일 사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불리한 전황에 대한 진실보도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 신문보도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들의 요구로 새 연립내각이 들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훗날, 패전한 독일 황제는 “우리는 데일리 메일 때문에 패했다. 진실을 알리는 펜의 힘,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진실 보도가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 보도는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본연의 사명과 함께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상업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고 특종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도처에 특종감이 널려 있는 전쟁만큼 미디어에 호재는 없다 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 때는 취재에서 보도까지 48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전황의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리얼하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언론을 선정주의에 빠져들게 해 국익을 해칠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 위원의 논문에서 거론됐듯이 언론의 선정주의는 적에 의해 심리전으로 역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모든 외신기자를 추방하면서도 유일하게 CNN기자만 잔류시킴으로써 다국적군에 의한 바그다드 지하 대피호 폭파와 무차별 공습, 오폭 등을 그대로 방송하게 하여 반전여론을 유도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전쟁으로 불가피하게 사상자가 발

생한다는 것은 반전론자나 평화론자에게는 커다란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보도와 지나치게 선정적인 과장·왜곡보도가 얼마만큼 국익에 해를 끼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방해가 되는지를 언론인 스스로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많은 국민이 갈등하고 있을 때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대한 왜곡 없이 진실만을 보도해야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군도 안보위기가 발생한 작전현장 등에 대한 취재보도진의 과도한 통제와 뒤늦은 사실 확인 및 해명이 불신과 추측보도를 유발해 비판과 오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미디어는 전쟁 뉴스를 보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미디어는 무기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쟁 수행기간 내내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최고의 무기는 여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여론지지 마저 없을 경우 제아무리 강한 경제력과 우수한 무기체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인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아가야 합니다. 군과 언론 중에 누가 국익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에게 맡기고 상대 집단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송 종 길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주제 발표 논문은 미국의 전쟁보도 시스템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언론학자로서 많은 것을 배움과 동시에 우리의 현실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의 차이점

미국은 지난 1차 대전 이후 세계전쟁을 주도해왔습니다만 모든 전쟁터가 미국과는 4,000~8,0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한국, 베트남, 이라크, 코소보 등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혹상을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어림짐작할 뿐이었지요. 그래서 미 백악관과 군 당국은 때로는 언론을 통제하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혼용해왔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에는 임베딩 시스템을 도입하고, CNN을 통해 전쟁의 상황을 스포츠중계처럼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베딩 시스템은 말 그대로 군 당국이 허락한 지역만을 취재하는 제한된 취재영역 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 지적하듯, 실상은 군 당국은 언론의 전쟁터 접근을 조금씩 봉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과 영토를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953년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는 긴장 속에서 여러 번 준전시상황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험했던 국가위기상황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쟁보도를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맞비교하는 것은 커다란 온도차가 있습니다. 가령 연평도나 백령도 등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나면 한반도 전체에 전운이 감돕니다. 관련지역 거주민은 물론이고 서울과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들 긴장 속에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추측과 언론보도에 귀와 눈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및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론은, 또 언론인들은 만약의 위기상황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더욱 값진 의미를 가질 듯합니다.

한국기자들의 전쟁취재 및 보도관행

베트남전쟁 이후 한국은 그동안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전쟁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원대를 파견하기도 했으나 그 숫자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자체가 교전지역에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에 국내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실상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사에서 전쟁지역에 기자를 파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생색내기 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제부나 사회부 등에서 파견된 젊은 기자들은 해당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없이 급하게 보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전지역을 직접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웃국가에서 한국교포들을 상대로 취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국내에서 스트레이트와 해설 등 기사의 상당부분은 외신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고 파견된 기자들은 현장감 있는 스케치 등을 덧붙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국의 경우에는 이라크 전쟁 때에 이집트 카이로 등지에서 취재하고 카이로 현지에서 생중계하곤 했습니다. 그나마 파견된 기자들도 전쟁이 발발하고 2-3주쯤 지나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하면 곧 바로 철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전쟁취재에 대한 규칙이나 매뉴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위기상황의 언론

국가가 위기상황에 있다면 언론은 진실과 국익 사이에서 고뇌해야 합니다. 서해교전이나 천안함 사건 같은 긴장감 높은 상황이라면 언론의 고뇌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국익을 생각한다고 해서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언론은 군의 보도자료만을 받아쓰는 선전기의 역할만 할 수 없습니다. 또 진실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언론이 취재한 모든 것을 보도했을 때에는 자칫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움에 처하는 더 큰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국익을 위해 보도통제를 감내해야 하고,

때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군의 요청도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진실과 국익 사이 그 중간지대,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군은 속성상 많은 정보를 통제하려 할 것이고 또 언론은 이를 헤치고 더 많은 정보를 보도하려 하기에 갈등은 필연일 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기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고,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어느 정도의 합의와 시나리오, 보도준칙 등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전에 평화 시에 미리 준칙 등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보도준칙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의 정확성과 국익보호,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언론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또 정확한 보도를 위해 미리 언론인들에게 군 시설과 군의 업무현황에 대해 백그라운드 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시대의 위기보도

지난 2000년 이후 언론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포함하여 기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을 정도입니다. 언론인의 증가는 정보의 다양성을 위해서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는 자칫 언론인들이 취재과정에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군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보도를 통제하기 힘들어지고, 잘못된 정보는 물론 원치 않는 보안내용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준전쟁 상황이 발발했을 경우, 상상 이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중심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보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수십 명 또 수백 명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자들을 포함한 풀(Pool)단을 미리 구성해놓아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 취재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미리 평화 시에 설명하고 그들의 협조약속도 받아놓아야 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할 때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풀기자를 구성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취재할 수 있을 때에는 구태여 비용과 인력을 들여 자사 기자를 현장에 파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풀단에 참여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평소에 사전 안보교육, 위기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어디까지 군사기밀이고 보호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상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서둘러 풀을 구성하고, 기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풀을 먼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 그 풀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안보 및 안전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기상황 발생 시에 취재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언론사 역시 국가안보 사항을 그냥 화재나 재난 발생 사건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맺는 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재앙은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First casualty is the truth).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위기상황에 어느 정도의 진실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지나친 통제는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군은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아마 모든 정보는 통제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처럼 본토와 떨어져서 전쟁을 벌인다면 군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려도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위기발생지역에도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유언비어는 더욱 늘어나고 부정확한 보도도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군에서도 무조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진실은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군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수위를 판단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신뢰가 형성됩니다. 기자들이 군

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어떠한 논의도 무의미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회로 군이 먼저 신뢰를 위한 손을 내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언론사 역시 위기 발생 시 어떻게 보도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모든 회사들이 국방전문기자를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젊은 기자를 화재현장에 보내듯, 긴장발생 현장에 보내어 단발적인 팩트만을 챙기면서 국가 보안사항을 노출시키는 경쟁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위기 발생 시에는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민하면서, 기사량과 기사의 톤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종 합 토 론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지금부터 국가위기관리와 언론의 기능에 대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과 지정토론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정 탁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전쟁과 언론보도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남전은 미국 언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언론보도는 철저히 애국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월남전 이후 ‘국가의 이익’과 ‘전쟁의 승리’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언론의 애국보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진보지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하여 상충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국방부의 전쟁 기밀문서를 보도한 것에 대해 뉴욕 대법원이 뉴욕타임즈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전쟁 특파원 역사에서 월남전 보도는 그 자체가 애국보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이익을 바라봄에 있어 정부와 국민의 시각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불일치하게 된다면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전방과 후방의 의견 일치입니다. 전·후방의 의견이 다를 경우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맥이 빠지고 전쟁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인, 군인, 특히 군 홍보담당자가 전쟁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전쟁을 수행할 경우 반작용이 클 것을 예상하고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내 여론이든 국제 여론이든 많은 시간을 들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극한적인 상황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정당성

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인부터 군 홍보담당자들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 홍보 시스템으로는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군 당국이 여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국가 위기의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정 명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주제 발표하신 발제문에서 미국은 베트남전의 패배의 요인으로 언론의 영향을 꼽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로써 미국 정부와 군, 언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베트남의 선제공격을 근거로 미국이 핵 함모, 구축함, 전투함, 함정 등으로 구성된 핵 함모 전단을 통킹만에 투입해 베트남을 초토화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를 빌미로 월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으나, 뉴욕타임즈가 군사계획 전문을 입수하여 사전에 보도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펜타곤 페이퍼 사건) 당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될 것이라며 통킹만 침공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킹만 침공계획은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기밀문서를 입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언론과 군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당시 미군 당국은 Inner Circle(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NBC, CBS, PBS 등 미국 주요 6개 언론사)에 대하여 중요한 군사 계획이 있기 전 출입기자를 극비리에 불러서 설명을 하며 엠바고를 걸고는 하였으나 통킹만 침범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침공사건입니다. 전 세계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전광석화 같은 공격으로 6일 만에 이집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 신문사는 사전에 침공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두 신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

니다. 오늘 토론에서 언론이 국가 안보상의 중대한 상황에서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이정명 위원께서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의 쟁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김 철 우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발제자)**

펜타곤 페이퍼 사건은 국가 안보의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 논의해 볼만한 사례입니다. 이익비교형량의 법칙에 의해 극비리의 군사 기밀을 보도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기밀의 판단기준으로 형식비, 실질비, 비공지성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사실상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군사기밀을 극비리에 입수해 공개여부를 고민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으나, 판단의 주체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개 이후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언론계와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오 풍 연 (파이낸셜 뉴스 논설위원)**

우리 언론계에서는 보통 선임기자가 데스크를 마치고 보직을 맡기에 마땅치 않을 때 군사전문기자, 행정전문기자 등 전문기자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언론사들이 전문기자를 임명할 때 회사 편의에서 하지 말고, 출입처에 인원을 좀 더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출입기자가 최대 8진까지 있지만 국방부는 한 두 명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국방부 출입기자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 국방부에서 사주를 만나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방전문기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출입한 기자에게 전문기자 자격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 진 우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계획담당)

현재 국방부 등 각 군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열린 마음으로 언론을 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이 아닌 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이 언론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예를 들자면, 국방부는 매일 일일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리핑할 내용이 없을지라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입기자들이 군 공보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가치, 국익, 군사 작전, 기밀 보호 등을 고려하다 보니 제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안보 위기시의 취재 준칙을 만들었고 어떻게 이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언론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취합하여 군과 언론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와 달리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 지휘관, 장교, 특히 공보 장교들이 언론을 이해하고 언론을 통해 군사작전, 평상시의 공보 작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edia Training 학교를 만들기 위해 중기계획으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원에서 언론의 입장과 군사적 관점을 수용하여 국가이익을 위해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군 공보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

등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SBS 논설위원실장)

제가 강릉 잠수함 사건, 이라크 전쟁, 레바논 전쟁을 직접 취재하면서 겪은 외국과 한국의 군사 공보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의 경험 중에 이스라엘이 취재에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취재하러 왔다고 하니 가장 먼저 공보실로 안내해 프레스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카드가 있으면 최전방이 아닌 이상 어느 곳이나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 시 언론보도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들어가기 전에 암만에서부터 프레스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두 차례씩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취재해야겠다는 조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릉 잠수함 사건 때에는 취재기자가 30명이었는데도 현지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은 그 전날 이미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정보를 찾아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군 기밀이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군사 기밀 논쟁은 또 다시 심해졌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취재에 제한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제한은 프레스 카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릉 잠수함 사건처럼 젊은 기자들이 용기와 무모한 배짱으로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에서 취재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군에서 취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김 인 철 (서울신문 심의위원)

6.25전쟁 이후 첫 교전은 2000년 연평해전일 것입니다. 당시 저는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었는데, 첫 교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방부 브리핑이 아니라 현장 기자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국방부 기자실에서 언제쯤 발표가 이뤄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브리핑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남북은 발표는 하지 않으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회사에서는 경찰 출입 1~2년차의 기자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아침 9시쯤 취재기자로부터 '총소리가 들립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표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었는데 아직도 대변인실은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보도는 아니더라도 방송 자막으로 교전 사실을 내보내도 될 것 같다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13년 전이 이러한데 지금이라고 적시에 대변인실에서 팩트를 말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일일브리핑은 제가 있을 때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해도 그것을 기사로 쓰는 기자는 드물 것입니다. 군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과 언론이 보도하고자 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확실하게 팩트를 알릴 수 있도록 군 당국에서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에 군 공보장교들이 많이 오셔서 언론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의 상식과 일반 사회의 상식이 일치되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국가위기상황에서 언론보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군 시스템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군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 흥 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관)

언론과 국가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국가안보가 언론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됐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강릉 무장공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합참공보실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제도나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점차 발전하여 오늘날 국방부에서는 오픈되고 투명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언론은 동반자 관계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추상적인 말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 제도, 규범,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언론과 자주 접촉하는 기회를 갖고 제도화된 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먼저 논설위원, 언론사 대표가 군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설화·전문화된 협의체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 사건 때 국방부는 군사 작전이 언론을 통해 다 누출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년에 보도준칙을 만들어 군과 언론이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준칙의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계와 국방부에서 규정을 구체화·세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언론계에서도 국방 관련 보도인력을 양성하고, 보도 안내서, 윤리 강령 등을 교육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김 대 영 (연합뉴스 논설위원)

가끔 언론에 군사기밀로 보이는, 북한이 알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언론에 군사 기밀을 왜 보도했냐는 식의 불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군사정보를 기자만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서 군사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국방부에서는 얼마나 빨리 이 사실을 파악하고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지,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진 우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계획담당)

팩트인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산하 조직도까지 보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의 질의 자료로부터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긴급히 출입기자, 각 언론사, 국회 기자실까지 연락을 취해 군사기밀 누출의 우려가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국방부 출입 기자만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기사를 막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반 관료들은 오히려 공보담당 장교들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보안 담당부서 등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조사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공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많았습니다. 국방부 공보장교들은 근무조를 편성해 합동참모본부 통제실에서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이 되면 즉시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두 달이나 대기상태를 지속하며, 미사일 발사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력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출입기자가 자주 바뀌는 것이 저희에게도 어려움입니다. 교육하고 이해를 시켜 놓으면 곧 다른 기자로 바뀝니다. 전문기자제도가 만들어져 보다 날카로운 분석으로 국민들에게 보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방 형 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통 언론 시대와 SNS 시대의 군과 언론의 관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만이 팩트를 보도했으나 지금은 개인도 SNS를 통해 사실 관계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NS 시대에는 팩트에 대한 보도 보다 팩트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의 진실여부는 언론의 자체적인 검증과 군의 발표에 의해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같은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팩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계속해서 쌓이면 편향된 정보가 제공되어 오히려 팩트 그 자체보다 더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올바른 해석을 위한 관점이며 이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군과 언론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SNS 시대에 군과 언론의 관계는 달라져야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정 충 신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문기자 제도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 그나마 언론에서 전문성이 가장 많이 유지되는 곳이 국방부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군만큼 전문적인 홍보 시스템을 갖춘 조직도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언론보도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 천안함 사태인데, 이 사건으로 군과 언론 모두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양 기관은 가장 전문성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가 국민의 편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본질

적인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당시 천안함 사태에서 언론보도의 혼란은 군 수뇌부가 판단을 하지 못해 홍보의 전략적 오류와 모순이 생겼고 이로 인해 언론대응의 타이밍을 놓쳐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변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군의 책임자들이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 대해 워낙 군 장성들이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교육시스템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례만으로도 충분한 교육 자료가 될 텐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3년 전의 미흡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안함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당시 왜 유언비어가 형성되었는지,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서 전략적인 홍보 전략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토론과 연구논문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계, 언론계,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홍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언론과 군이 각자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자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발제자의 답변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 김 철 우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발제자)

군과 언론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갖고,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화시키고 해결해 나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과 언론 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로서 영국의 국가언론협력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상호협력을 이루어나가는 언론국방홍보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소통의 위기’라고 합니다. 소통이 불통되면 국민들의 울화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과 언론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성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발제자께서 미국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답게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계 제일의 수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군과 언론이 윈-윈하는 미국의 성공적인 언론관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언론과 정부는 국가위기시에 모두 국익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국민인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전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전략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국익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무엇이 비밀인가가 늘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군은 비밀이라고 하지만 언론은 비밀이 아니라고 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밀 도장이 찍혔

는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밀이란 상대가 알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 입니다. 상대가 알아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은 비밀이 아니겠지요. 또한 상대가 알게 되어도 아군에 큰 피해가 생기지 않으면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조만간 공개될 내용은 비밀이라 보기 힘듭니다. 만일 오늘 비밀이라고 했으나 내일 다 공개된다면 당국의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의 이용 가능성, 우리의 피해 가능성,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한다면 군과 언론 간의 갈등이 보다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현채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영국군의 포탄의 진실에 대해 보도한 사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국군에 피해를 입혔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미라이 학살 사건도 미군이 공개를 막았으나 이후 언론에 보도가 되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반전 여론이 일어나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단기적으로는 미군이 손해를 봤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전을 종결하고 미국이 인권의 옹호를 지지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언론보도는 단기적으로는 국익을 해칠지 모르나 장기적·전략적으로는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독재 국가들의 경우라면 언론보도가 더 높은 국가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익이라는 문제는 단기적·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비밀이라는 것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 위기관리를 위해 국가와 언론이 각기 할 수 있는 역할, 국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사회자)

이상으로 2013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제자 김철우 위원님, 지정토론자 박현채 위원님, 송종길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